

#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90
------------	-----

2012년 6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5일, 김형식 의원 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2.6.2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김형식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사업’을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 여겨지는 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성, 한국철도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고, 특혜 논란이 있는 ‘수서발 KTX 민영

화(경쟁체제) 추진'을 중단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당초 약속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산업 개편을 논의할 것을 건의함

#### 다. 이송처

- 국회 : 국토해양위원회
- 정부 :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을 중단하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KTX 민영화에 대해 신중히 처리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임

#### 나.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에 대한 검토의견

- 국토해양부(이하 정부)는 철도산업 발전과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수서~부산·목포)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노선에 대한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을 기한으로 선로를 임대할 계획에 있음<sup>1)</sup>
- 현재 코레일은 KTX, 수도권전철 등 여객노선, 컨테이너 등 화물노선, 우편차 등 기타노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중 KTX를 제외한 모든 노선들은 상시 적자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는 KTX에서 발생하는 운영수익으로 적자노선을 '교차보조' 해주고 있음<sup>2)</sup>

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4.19, p.1-2

2) 영업이익률 약 29%,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4.19, p.8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KTX의 독점적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자칫 여타 노선 운영의 부실화와 비수익노선의 축소 또는 폐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철도는 궤도, 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시스템 산업으로서 그 운영주체를 달리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정부는 KTX 운영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15%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up>3)</sup> 물론 민자 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는 민간이 시장진입을 위해 요금인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통상적으로 민간 운영시 노선임대기간 만료 직전 운영수익 증대를 위해 시설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서비스가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가 과연 국민에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결론적으로 ‘수서발 KTX 노선민영화’는 노선 운영의 부실화와 비수익노선의 축소 또는 폐지 우려 등 안전성과 서비스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KTX 민영화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동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4.19, p.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 촉구 건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의 '수서발 노선'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명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4월 19일에는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민간경쟁도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하는 등, 특혜성 논란이 있는 KTX 민영화 사업계획을 사회적 논의 및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은 철도건설, 차량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용자 안전, 이용운임 상승 부담 등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학계, 여야 정당, 국회 등 각계 또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은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한 채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려는 의도 말고는 달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업은 KTX 노선 외에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적자노선과 철도역 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저렴한 운임의 국민 교통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한다면, '한국철도공사의 방만한 독점경영 문제를 경쟁체제를 통해 해소하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 등 철도 이용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안겨주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기반시설 투자외면으로 인한 잦은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영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운임 조정 논란은 각계각층이 왜 ‘수서발 KTX 민영화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지를 잘 이해시켜주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서발 KTX 민영화(경쟁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당초 약속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철도 산업 개편을 논의할 것을 건의한다.

2012년 6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